

# 참여연대 정책자료

발행일 2019. 11. 05.

##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남북 군사 합의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 중단해야

# 목차

---

요약	3
전반적인 평가	5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8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13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16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19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22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수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24

- 본 의견서는 2020년 국방 예산안의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해 분석한 의견서로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었음.
-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1,5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규모임. 이중 전력 운영비는 33조 4,612억 원(66.7%),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915억 원(33.3%)임. 대부분이 무기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했음.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2009~2017)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함.
-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것임.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 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되었음.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함.
- F-35A 도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임. 기술적 결함이나 기종 선정의 위법 행위 등을 무시하며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는 즉각 중단해야 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초기 단계인 지금 ‘KF-X 사업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 타당성, 작전요구성능(ROC) 재검토, 기술 개발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 분담금 납부 등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야 함. 비현실적인 무기 개발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이유는 없음.
- 또한,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인 다목적 대형 수송함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격전지로 만들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선행 연구 용역 예산 역시 전액 삭감해야 함.
- 전력운영비의 경우, 비대한 병력 규모 축소와 과대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요구됨.

- 국방 예산은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음. 특히, 주로 무기 획득 사업인 방위사업청 예산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모든 자료가 비공개 되어 예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 통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국방 예산 관련 정보 공개 범위는 확대되어야 함.

# 전반적인 평가

## 현황

- 2020년 국방 예산안은 50조 1,5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조 원, 7.4% 증가했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50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

<표1> 2020년 국방 예산안

(단위: 억 원)

구분	2019년 예산(A)	2020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b>국방 예산</b>	<b>46조 6,971</b>	<b>50조 1,527</b>	<b>3조 4,556</b>	<b>7.4</b>
전력운영비	31조 3,238	33조 4,612	2조 1,374	6.8
방위력개선비	15조 3,733	16조 6,915	1조 3,182	8.6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2020년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 개막>, 2019.8.29

- 국방 예산안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3%를 차지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2009~2017)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함.

<표2> 방위력개선 증가율

(단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	12.2	5.7	6.5	2.1	2.2	3.9	4.8	5.7	4.8	10.8	13.7	8.6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2020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개막>, 2019.8.29

- 국방부는 2020년 국방 예산안을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 투자'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의 접목, 군 구조의 정예화에 집중 투자' 획득 정책의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장병의 기본적 생활 여건 개선 및 자기개발 여건 보장 등 생산적

병영문화 구현에 투자' 등의 방향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음.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290조 5천억 원의 국방비를 투입할 예정임.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음.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외교·통일부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1/9 수준임.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닌 사회 불평등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역행하는 군비 증강

-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것임.
- 올해 북한은 남측의 공격형 무기 도입,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왔으며 이를 명분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 시험 등을 진행해왔음. 이러한 남북 간 군비 경쟁은 어렵게 만든 신뢰 구축과 대화의 국면을 이어갈 동력을 약화하고 있음.

### 미국산 무기 구매 편중

- 한국은 지난 1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함<sup>1</sup>.
-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은 이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노스롭 그루먼사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보잉사의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등을 막대한 비용을 주고 구매했음.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역시 록히드 마틴사의 MH-60R 시호크 도입을, 해군은 레이시온사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첨단 무기일수록 도입 이후 운용·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한국군은 이 역시 모두 미국의 군수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sup>1</sup> 연합뉴스, <최근 13년간 해외무기 구입액 45조 7천억.. 미국산 78% 차지>, 2019.10.6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6019200001?input=1195m>

군축을 어렵게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옴.

### 국방 예산 관련 정보 공개되어야

-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임. 특히, 주로 무기 획득 사업인 방위사업청 예산은 원문 비공개는 물론 이와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국회 회의록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까지 모두 비공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 원문을 비롯해 세부 내용, 분석, 관련 설명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예산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통해 상세히 공개<sup>2</sup>하고 있음.
- 광범위한 예산 정보 비공개는 국방 예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 통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국방 예산 관련 정보 공개 범위는 확대되어야 함.

---

<sup>2</sup> Under Secretary of Defense(Comptroller), Defense Budget Materials - FY2020  
<https://comptroller.defense.gov/Budget-Materials>

#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표3> 핵·WMD 대응 체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가율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
전략 표적 타격	MS-SAR 2차(R&D)	13,185	5,502	5,502	16,101	15,902	10,400	189
	MUAV(R&D)	227	5,519	5,519	5,519	5,519	-	-
	425사업(R&D)	106,737	207,919	207,919	245,904	234,493	26,574	12.8
	다출처영상융합체계 (R&D)		14,875	14,875	25,468	25,426	10,551	70.9
	중고도정찰용무인항 공기(MUAV)	1,343	286	286	70,019	-	-286	순감
	고고도정찰용무인기 (HUAV)	103,276	199,704	199,704	132	108	-199,596	-99.9
	장보고-III 전투체계(R&D)	11,095	20,157	20,157	24,361	24,355	4,198	20.8
	장보고-III 소나체계(R&D)	8,453	17,382	17,382	22,926	22,926	5,544	31.9
	장보고-II	52,141	1,170	1,170				
	장보고-III Batch-I	491,554	299,092	299,092	540,326	527,030	227,938	76.2
	장보고-III Batch-II	28,848	30,148	30,148	133,241	132,614	102,466	339.9
	해상작전헬기	15,229	50,660	50,660	234,894	229,796	179,136	353.6
	해상 초계기-II	783	195,831	195,831	767,859	767,859	572,028	292.1
	F-35A	1,335,005	1,556,150	1,556,150	1,795,734	1,795,734	239,584	15.4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349	13,125	13,125	21,197	21,197	8,072	61.5
	전술지대지유도무기 (R&D)	9,674	4,900	4,900			-4,900	순감
	현무성능개량	2,859						
	해성성능개량		33,627	33,627			-33,627	순감
	해성2차성능개량 (R&D)	13,892	24,164	24,164	87,320	87,320	63,156	261.4
	현무2차 성능개량(R&D)	143,835	105,450	105,450	74,765	74,765	-30,685	-29.1
정전탄(R&D)				8,000	8,000	8,000	순증	



	전술함대지유도탄 (경사형)	14,400	5,629	5,629	924	924	-4,705	-83.6
	자항기뢰	15,226	15,003	15,003	21,127	21,127	6,124	40.8
	전술함대지유도탄 (수직형)	20,045	17,973	17,973	24,412	24,412	6,439	35.8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115,635	79,257	79,257	60,091	60,091	-19,166	-24.2
	레이저유도폭탄 2차							
	GPS 유도폭탄 (2000lbs급) 4차	-	-	-	112,541	112,541	112,541	순증
	전술지대지유도무기	0	600	600	63,027	63,027	62,427	10404.5
	현무2차 성능개량	316,335	442,654	442,654	242,139	242,139	-200,515	-45.3
	GPS유도폭탄 (JDAM급)2차		500	500	941		-500	순감
한미연합군사령관	701 사업(R&D)	58,122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R&D)	-	2,236	2,236	15,000	14,973	12,737	569.6
	광개토-III Batch-II 통합소나체계 (R&D)	27,700	35,330	35,330	55,915	55,915	20,585	58.3
	한국형수직발사체계 (KVLS-II)(R&D)				7,245	7,244	7,244	순증
	광개토-III Batch-II	222,897	514,684	514,684	555,849	555,459	40,775	7.9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R&D)	93,755	54,974	54,974	155,552	155,552	100,578	183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47,249	32,313	32,313	42,672	42,672	10,359	32.1
	철매-II 성능개량	167,542	136,663	136,663	169,272	169,272	32,609	23.9
	함대공유도탄	11	50,711	50,711	70,606	70,606	19,895	39.2
	패트리엇 PAC-3 유도탄 2차	16,686	119,025	119,025	71,684	71,684	-47,341	-39.8
	패트리엇 성능개량	375,330	278,642	278,642	82,485	82,485	-196,157	-70.4
00 대우	특수작전용유탄발사기	54	8,437	8,437	2,380	2,380	-6,057	-72
	K9A1자주포	4,800	40,012	40,012	12,135	12,135	-27,877	-69.7
	특임여단능력보강	18	9,091	9,091	17,886	13,460	4,369	48.1
	CH/HH-47D 성능개량	16	44,296	44,296	54,556	19	-44,277	-100.0
	전용기술(R&D)	505,418	508,307	508,307	463,737	463,737	-44,570	-8.8
<b>총합</b>	<b>4,339,724</b>	<b>5,151,998</b>	<b>5,181,998</b>	<b>6,375,942</b>	<b>6,214,898</b>	<b>1,038,070</b>		

출처: 방위사업청,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저자 편집, 2019.9

-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용어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 북핵·미사일 작전 체계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은 ‘전략 표적 타격’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동원해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는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변경되었음.
- 2020년 3축 체계 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총 6조 2,149억 원이 책정됨. 전년 대비 1조 380억, 약 20% 증가한 수치임.
- 3축 체계 예산은 2016년 3조 1,814억 원에서 2017년 3조 8,119억 원, 2018년 4조 3,628억 원, 2019년 5조 691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20년 예산은 6조 2,149억 원으로 2016년 대비 95% 증가함<sup>3</sup>.

<표4> 3축 체계 관련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3축 체계 예산	31,814	38,119	43,628	50,691	62,149

출처: 방위사업청,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등 활용 저자 편집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

- 지난해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합의 재확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합의한 바 있음.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을 포함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DMZ 내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등 일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함.
-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개념인 전략 표적 타격(킬 체인)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 51조와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더불어 선제공격론이 야기할 안보 딜레마의 격화 역시 중대한 문제임. 또한 압도적 대응(KMPR)의 핵심 전력으로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와 핵, WMD를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의 능력보강’ 사업은 적대적인 대북 정책의 상징임.
- 한반도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음.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음.

<sup>3</sup> 3축 체계 예산은 예산과 결산 자료에서 사업 목록 차이가 있어 예산이 조금씩 상이함.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임.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음.

- 그러나 북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를 확장하는 계획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임. 북한의 핵무장을 힘의 우위로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은 또 다른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임.

## 막대한 예산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 떨어져

- 국방부는 전략 표적 타격(킬 체인)을 통해 미사일 도발 징후 포착 30분 이내에 도발 원점을 선제공격하여 제거하겠다고 밝혀옴. 국방부가 주장하는 킬 체인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탐지-식별-결심-타격을 위한 수단이 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막대한 군사비 투자에 비해 기술적으로 성취하기는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일례로 지난 2017년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의 중심지역에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선제타격하기 위해 (군이 보유를 추진하는) 5기의 위성을 이용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이동식 발사대만을 가정하더라도 임무 성공 확률은 0.12~2.64% 수준에 불과하다”<sup>4</sup>고 지적하며 킬 체인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조차 킬 체인에 대해 “원래 목표와 달리 발사 전 탐지 자체가 어려운데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쏠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과 미국이 선제공격했다고 잡아떼면 국제법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sup>5</sup>
-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역시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미군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여 사실상 미국 MD의 하위개념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음.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일 뿐, 그동안 실제 한국군의 행보는 미국 MD 편입에 맞춰져 있었음. 다국적 MD 훈련 참여,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사드 한국 배치 등이 모두 연장선상에 있음. 한미는 2013년 제45차 SCM에서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로 합의한 뒤, 2016년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와 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를 미 전술 데이터 링크로 연결하는 등 한국 KAMD와 미국 MD와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왔음. 한편 군은 해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SM-3 요격 미사일 도입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sup>4</sup> 매일경제, <킬체인 실효성 없어..성공확률 최대 2.64% 불과>, 2017.11.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11/723848/>

<sup>5</sup>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65>

## 결론

-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북핵·미사일과 주변국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삭감해야 함.

##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표5> F-35A 도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
F-35A	1,335,005	1,556,150	1,556,150	1,795,734	1,795,734	239,584	15.4

출처 : 방위사업청,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2019.9

- F-35A 사업은 총 사업비 7조 6,783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F-35A 40대를 구매하는 사업임. 2020년 예산에는 전년 대비 약 2,395억 원(15.4%)이 증액된 1조 7,957억 원이 편성됨.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공격형 무기 도입

- F-35A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혀왔음. 한반도 평화와 단계적 군축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군비 확장에 집중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음.
- 국책연구기관 고위 관계자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첨단무기 수입 등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일관성 있는 방침의 조율이 필요하다”<sup>6</sup>고 평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임. 북한은 지난 정부에서 구매한 F-35A가 올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정면 도전했다”는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 그동안 국방부는 F-35A 도입의 기대 효과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를 내세웠으나 작년부턴 ‘주변국 잠재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로 변경하여 설명하고 있음. 국방부도 더 이상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이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이에 더해 공군은 현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을 통해 F-35A 20대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군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도입을 위해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sup>6</sup> 한겨레, <한미 ‘연합 공중훈련’ 올해도 안해... 북미대화 진전 힘심기>, 2019.11.03.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15628.html>

##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

- 감사원은 올해 2월과 5월,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과 절충 교역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 이전 관련 사항 허위 보고 문제, 국방부가 보잉의 F-15SE 기종 선정안을 부결한 뒤 F-X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사청의 권한을 침범하고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TF를 운영한 문제,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허위 보고한 사실 등이 밝혀짐.
- 구체적으로 방위사업청은 2014년 계약 당시 F-35A 구매 대가로 군사통신위성을 무상 제공 받는 절충교역인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유상 구매하는 조건이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군사통신위성 구입에는 5천 8백억 원<sup>7</sup>이 소요됨.
- 또한 록히드 마틴의 F-35A 구매를 계약하면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해 이전 받기로 한 핵심 기술 4건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음. 계약 당시부터 록히드 마틴은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국방부는 F-35A 구매를 결정했으며, 기술 이전 불가 결정이 나고도 바로 알리지 않고 침묵해왔음.
- F-35A 도입에 대한 국회 예산 심사 시 이러한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되거나 평가되지 않았음. 수조 원을 쏟아붓는 무기 도입 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음. 방사청은 감사원 결과 발표 후 기술 이전에 대해 허위 보고한 관련자 2명에게 연말 성과급 감액 조치를 내렸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음.

## 기술적 결함 해결 안돼

-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시스템인 F-35는 개발 과정에서 결함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여전히 다수의 기술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됨. 지난 6월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는 F-35의 기술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종사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전투기의 핵심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sup>8</sup>고 보도함.
- 지난 4월, 일본에서 F-35A가 야간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이후 일본 정부는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방향감각 상실이었다고 발표했으나 F-35A 개발 과정에서 조종사들이 저산소증을 보고하여 일시적으로 비행을 중단한 일, F-35A가 자위대 배치 전 2차례 기체 이상으로 비상 착륙한 일 등을 볼 때 기체 결함에 대한 우려는 여전함. 이에 앞서 지난해

<sup>7</sup> KBS, <[뉴스해설] 공짜라던 위성에 수천억원..혈세 낭비 재발 막아야>, 2019.10.2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2162&ref=A>

<sup>8</sup> Defense News, <Here are the problems faced by the F-35, and how some can be fixed>, 2019.6.17

<https://www.defensenews.com/newsletters/tv-next-episode/2019/06/17/here-are-the-problems-faced-by-the-f-35-and-how-some-can-be-fixed/>

9월에는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F-35B가 연료관 이상으로 추정되는 기체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기도 했음.

- 일본 사고 당시 F-35A는 훈련 도중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35A가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는 ‘스텔스’ 기능은 일반 레이더에서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군 레이더 상에서도 교신이 끊어질 경우 관제 실패 가능성이 있으며, 훈련 시 여타 공군기나 민간 항공기 운항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sup>9</sup>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결론

- 지금이라도 F-35A 도입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또한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는 즉각 중단해야 함.

---

<sup>9</sup> 민중의 소리, <‘한 대 1천억원’ F-35A 전투기 일본서 추락 파문... 한국은 괜찮다?>, 2019.4.11.  
<http://www.vop.co.kr/A00001397304.html>

##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표6> 보라매(R&D)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
보라매 (R&D)	435,570	664,191	664,191	1,046,455	1,040,255	376,064	56.6

출처 : 방위사업청,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2019.9.

- 보라매(R&D) 사업은 총 사업비 8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 양산하는 사업임. 2020년 예산에는 전년 대비 3,760억 원(56.6%)이 증액된 1조 402억 원이 편성됨.

<표7> 보라매(R&D) 총 사업비

(단위: 억 원)

연도	사업기간	2016까지 기투자액	2017	2018	2019	2020(안)	2021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4 ~2028	1,440.58	3,032.18	4,352.70	6,641.91	10,402.55	27,757.19	53,627.11

출처 : 방위사업청,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2019.9.

### 기술 이전 거부로 국내 개발 진행 중이나 문제는 산적

-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애초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음. 그러나 2015년 4월 미국 정부는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 등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함. 이후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함.
- 기술 이전이 거부되자 2015년 하반기 국방과학연구소(ADD)는 4개 항공전자장비 통합 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방사청과 국방부 역시 갑자기 국내 개발을 자신하며 사업을 밀어붙였음. 처음부터 핵심 기술 개발이 가능했다면 왜 기술 이전 등을 전제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록히드 마틴의 F-35A를 구매했는지 납득할 수 없음.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KF-X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으며,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국내 개발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이었음.

- 이후 방사청은 2017~2018년 AESA 레이더 점검위원회 가동 결과 최종적으로 국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으며, 올해 9월 군 요구성능을 모두 반영한 상세 설계를 확정하여 시제기 제작에 돌입한다고 밝힘. 2021년 5월 시제 1호기 출고,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 시작,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는 계획임.
- 현재 개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KF-X에 장착한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sup>10</sup>, 방위사업청 KF-X 자문단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전직 공군 장교는 “AESA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하드웨어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초기 개발 단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있다”<sup>11</sup>고 지적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미납으로 공동개발 불투명

- 보라매 사업의 총 사업비는 한국이 60%, 인도네시아에서 20%, 국내의 업체에서 20%를 각각 부담함.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2017년까지 총 952억 원을 납부하였고, 2018년에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9년이 되어서야 1,320억 원을 납부하는 등 2019년 전반기까지 납부해야 할 비용 분담금 5,282억 원 중 2,272억 원(43%)만 납부한 상황임.
-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미납으로 방사청은 개발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2017년 사업 관리비 및 출연금 134억 7,3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18년에도 403억 7,800만 원을 전용 또는 조정한 바 있음.
- 지난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 분담금 비율 조정, 분담금 납부 방법 조정 등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인하 혹은 현금 대신 현물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양국 정부는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합의한 내용은 없음.

<sup>10</sup> 세계일보, <포류하는 KF-X..스텔스·무장 탑재 놓고 ‘파열음’>, 2019.10.19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8511797?OutUrl=naver>

<sup>11</sup> Defense News, <South Korea’s future fighter program at risk, even as development moves along>, 2019.10.15

<https://www.defensenews.com/2019/10/15/south-koreas-future-fighter-program-at-risk-even-as-development-moves-along/>

## 결론

- KF-X 사업은 오랫동안 타당성부터 개발 성공 가능성까지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음.  
19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KF-X 사업 문제를 여러차례 다루면서 비록 성과가 없었지만 'KF-X 사업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음.  
그러나 20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검증 노력조차 보이지 않음.
- 국회는 KF-X 사업 초기 단계인 지금 'KF-X 사업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 타당성, 작전요구성능(ROC) 재검토, 기술 개발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 분담금 납부 등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야 함. 비현실적인 무기 개발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이유는 없음.

##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표8> 다목적 대형 수송함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예산
비행갑판과 플랫폼 설계 기술 선행 연구	9,500
통합전투체계 기술	12,000
스텔스 성능 기술	4,000
함정개념 설계	1,600
<b>총합</b>	<b>27,100</b>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2020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개막> 활용 저자 편집, 2019.8.28

- 지난 8월 14일 발표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16대 가량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인 다목적 대형 수송함(LPX-II)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국방부는 “탑재 항공기 기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현재 도입 가능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F-35B가 유일함.
- 방위사업청은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2020년부터 함정 개념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271억 원을 편성했음. 선행 연구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2021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확정된 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2025년 탐색 개발을 실시, 2026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33년 전력화할 예정임.<sup>12</sup>

###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 해군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열강을 핑계로 ‘대양 해군’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으며, 경항공모함 보유는 해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음. 해군은 1990년대부터 끊임없이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음.
-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음. 국방부는

<sup>12</sup> 세계일보, <동해에 ‘태극마크’ 항공모함 띄울 수 있을까>, 2019.10.13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1510250>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해왔음.

-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영해 밖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임.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이 어떤 지역과 상황을 가정하는지, 한국군에 원거리 작전 능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음.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결국 동아시아 안보 딜레마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16대 가랑 전투기를 탑재하겠다는 경항공모함은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적인 군사력이며, 항공모함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지 않고 항모 방어를 위한 전단을 구성해야 함. 군이 주장하는 항공모함 보유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1척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결국 또다른 항공모함 건조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주변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타당성이 없음. 지난 10월 10일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종로 의원은 “공중급유기가 생기고 항공기 성능도 좋아지면서 작전 변경이 넓어졌다. 한반도를 다 커버하는데 항모가 필요하냐.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F-35B, 경항공모함,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도입’으로 규정하며, “집 앞 편의점에 가는데 콜택시를 부르는 꼴”이라며 “짧고 가까운 전구(戰區)를 관리하는데 경항모는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경항공모함 건조의 타당성은 없는 반면, 건조와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됨. 2015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의뢰로 작성된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조 1,509억 원<sup>13</sup>이 소요되며, F-35B 등 탑재 항공기 도입 비용을 추가하면 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남. 또한, 항공모함의 연간 운용 유지비는 통상 건조 비용의 1/10 수준으로 이 역시 막대한 금액임.

##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부추길 공격적인 전력

-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상충됨.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sup>13</sup> 월간조선,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보고서: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함이 국내 목표 항모 모델>, 2017.12.22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G&nNewsNumb=201801100015>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임. 한국은 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위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결론

- 다목적 대형 수송함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경항공모함 건조, F-35B 도입,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등 맹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은 중단되어야 함.

##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표9>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
원거리 탐색구조대 창설 관련 연구용역	-	-	155	155	155	순증

출처: 국방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활용 저자 편집, 2019.9.

-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 설명서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반영하였음. 구체적으로 2021년~2025년까지 총 2,951억 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 즉 제주도에 공군부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임.
- 관련하여 2020년 예산에 탐색구조부대 창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 관리 및 사업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함.
- 앞서 2018년 6월,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정책 연구를 통해 탐색구조 전력은 제주도 내 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음. 공군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강정에는 해군기지, 성산에는 공군기지 건설

-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국방부가 96-00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제주 공군기지 창설을 반영한 이래 20여 년 넘게 유지되어 온 계획임. 이것은 사실상 제주 공군기지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짐.
- 지난 2017년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밝혔고,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성용 소장 역시 제주도가 대상지라고 확인하며 이미 운용 중인 공항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국방부는 ‘탐색구조’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부대 항공전력의 규모나 종류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음.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 편성 배경 중 하나로 ‘전투기/급유기의 성능 향상에

따른 훈련 요구도 충족 및 내륙 공역 협소/포함 등으로 해상 광역화 공역 훈련 소요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음.

- 일례로 한미일 해군은 제주 인근 해역에서 '수색 및 구조 훈련(SAREX)'과 '해양차단작전 훈련'을 함께 실시해왔으며 이러한 훈련에는 각국의 이지스함을 비롯해 해상 전력이 대거 동원되었음. 지난 2014년에는 미군의 핵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기도 했음. '수색 및 구조'라는 명분의 연합훈련으로 해상에서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발전시켜온 것임. 제주해군기지에는 완공 이후 미 해군 함정들이 잇따라 드나들었으며, 핵추진잠수함까지 입항하는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탐색구조'를 명분으로 건설될 공군기지 역시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미 공군전력이 들어올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려우며 공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해군기지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임.
- 제주도 남방해역은 한국,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겹치는 지역으로 군비 증강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곳임. 현재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바다의 긴장을 줄이고 실질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군사화 조치임. 또한, 군이 필요성으로 언급하고 있는 재난/재해시 탐색구조나 의료지원, 대민지원은 안전 관련 예산과 정책으로 충족할 일이지 또 다른 군사기지 건설이나 군사력 배치가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격전지로 만들 공군기지 건설 계획은 중단해야 하며, 관련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함.

##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수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표10> 2020년 급여정책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
군 인 인 건 비	장교인건비	4,257,804	4,327,136	4,327,136	4,459,022	4,435,633	108,497	2.5
	부사관인건비	5,293,316	5,478,808	5,478,808	5,741,170	5,717,865	239,057	4.4
	병인건비	1,741,239	1,691,963	1,691,963	2,097,536	2,096,479	404,516	23.9
	군무원인건비	1,651,675	1,780,591	1,780,591	1,960,027	1,961,075	180,484	10.1
	공무원 인건비	56,792	61,403	61,403	63,245	65,276	3,873	6.3
	건강보험부담금	313,524	306,006	306,006	350,058	332,064	26,058	8.5
	<b>합계</b>	<b>13,314,350</b>	<b>13,645,907</b>	<b>13,645,907</b>	<b>14,671,058</b>	<b>14,608,392</b>	<b>962,485</b>	<b>7.1</b>

출처 : 국방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2019.9

### 대규모 병력 유지는 불필요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로 전환할 계획임.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첨단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와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임.
- 군이 대규모 상비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예전부터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음. 한미 연합 전력의 북한 점령 계획이나 안정화 작전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며 추가 병력 감축이 필요함.



## 장군 수, 장교 수 감축 계획 필요

- 전력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로, 전체 국방 예산의 29%에 달하는 14조 6,084억 원이 배정되었음. 비대한 병력 규모와 많은 장교 숫자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이유 중 하나임.
- 군 구조 개혁을 위해 간부 감축은 필수적임.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군 중 76명을 줄여도 군인 1만 명 당 장군 수는 7.2명으로 미국(5명), 프랑스(4명)에 비추어도 여전히 과다함.
-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9년 장교 397명이 감원되어 현재 한국의 장교 수는 70,771명임. 2022년까지 목표치대로 감원된다 하더라도 장교 수는 7만 명에 달함. 이는 유럽의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임. 유럽과 대만 등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력을 감축하면서 고급 장교의 수도 대폭 줄여왔음. 반면, 한국군의 장교 수는 국방개혁을 논의하던 2005년 6만 5천 명에서 오히려 증가해왔음.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는 5만 명 이하로 감축되어야 함. 장교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인사 적체 때문에 결국 장군 수의 획기적 감축도 어려움.

<표11> 군인 인건비 예산

		인건비(억원)	비율(%)	인원수(명)	비율(%)
장교	장교	44,356.33	36	70,771	13
	무관후보생			4,510	
부사관	부사관	5,7178.65	47	120,241	23
	전문하사			8,490	
	부사관 후보생			2,720	
병	병	20,964.79	17	348,491	64
	상근예비역			15,992	
총합		122,499.77	100	571,215	100

출처 : 국방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2019.9

-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인건비 모두 전년 대비 증액되었음. 장교 인건비는 처우 개선 등 명목으로 약 1,085억 원, 부사관 인건비는 증원과 처우 개선 명목으로 2,391억 원이 증액되었음.
- 현재 한국군 규모는 57만 1천 명으로 이중 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임. 병력의 64%를 차지하는 병 인건비는 군인 인건비 중 약 17%인 반면, 병력의 13% 수준인 장교 인건비는

군인 인건비 중 약 36%를 차지하고 있음. 국방부는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사병 인건비(병장 기준)는 540,900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대비 30%로 여전히 턱없이 낮은 금액임.

## 결론

- 비대한 병력 규모를 축소하고 간부 숫자를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한편, 사병 월급은 대폭 인상해야 함. 예산 심사 시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함.

참여연대 정책자료  
**2020 국방예산 의견서**

발행일 2019. 11. 05  
발행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mailto:peace@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